제346회국회 (정기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1월29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외교부 업무현황 보고

상정된 안건

1. 외교부 업무현황 보고 ····· 1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외교부 업무현황 보고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기회 마무리 등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 또한 앞으로의 정세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의 문제를 비롯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납북자·군국포로 송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많은 유기적 현안과 과제들이 진전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엄중한 시점인 만큼 외교부에서는 맡은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어려운 남북관계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외교정책적 과제와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함께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남북관계개선특위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회의는 못 했지만 4차 회의를 하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3당 간사와 합의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일단 중간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1차에 한해서 다시 남북관계개선특위를 연장하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정양석 새누리당 간사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최경환 국민의당 간사님, 남북관계개선특위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장관입니다.

20여 년 전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엄중한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해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계신 남북관계개선특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 우리의 대응 현황을 직접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간 관계상 여타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로서 지난 10년간 5회, 특히 금년에만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추가하여 24회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핵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 등을 통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빠른 속도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감안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쪽 하단에서 보시듯이 지난 2월부터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 및 고위급 차원에서 다양한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고강도 대북압박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정부는 외교적 압박·제재와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적 억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의 적기 출범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연합 대북 억제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외교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유엔안보리의 제재, 둘째 주요국의 독자 제재, 셋째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대북 압박 조치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평가받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운·항공 활동 차단, 불법 금융거래 차단, 군경협력 단절, 불법행위 개인에 대한 제재, 대외교역 제한 등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동맹권이나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들까지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2270호 결의를 최대한 보완한, 보다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그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 공동 초안을 기초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고강도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총력 외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신규 안보리 결의문안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주 중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신규 제재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를 추가 확대하는 다양한 실효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다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신규 결의는 그간 소위 민생 예외조항으로 간주된 석탄에 대해 금수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북한의 주요 외화소득원을 상당히 차단하고, 육상·해상·항공 운송 검색·차단 강화에 이어서 WMD 및 재래식 무기 금수 강화, 특히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등 금융 통제 등에 이어서 새롭게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 정지가 가능함을 엄중 경고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등 제반 분야별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화 획득을 상당히 억제하고, 북한 정권에 가시적인 고통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마디로 결의 2270호가 인도적 고려를 해서 일부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면 금번에 채택되는 결의는 이러한 조항마저 더 강화시킴으로써 가중처벌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안보리 결의 이외에 한국·미국·일본·EU 등 우방국들이 취하고 있는 독자제재 조치들 역시 기존의 대북 독자제재와 비교 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하에 대북압박 공조 노력이 계속 상호 추동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월 대북제재법 발효, 3월 행정명령 13722호 발표에 이어서 6월에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7월에는 김정은을 인권침해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북한이 대서방 창구로 의존해 온 EU는 핵심 회원국들의 주도하에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으로 지정하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와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북한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우리 정부는 그간 미·일·EU 등 우방국과 긴밀히 조율해 온 독자 제재조치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 독자 제재조치는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출입국 제한 등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여 북한에게 실효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외교 고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70여 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북한과의 고위인사 교류, 공관개설 협력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고립 탈피를 위해서 유엔총회, ARF 등 다양한 다자회의에 참석하고, 이러한 계기에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방문과 면담 등을 시도했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방문이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등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고, 저도 유엔총회와 NATO에서 북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안보리결의안 등에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외교적 고립은 금년 초 이래 거의 매달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대북 규탄·압박 메시지가 채택되는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빈틈없는 공조를 해 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 중국이 주최한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가장 긴 조항이 포함된 결과 문서가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5월 G7 정상회의, 6월 원자력공급국그룹회의, 7월 ASEM 정상회의에서 대북규탄 메시지가 발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발신되었습니다.

7월 말에 북한도 참석한 ARF 외교장관회의, 9월 동아시아정상회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160여 개국이 참여하는 IAEA 총회, 그리고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또 며칠 전 MIKTA 외교장관회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한 일관된 메시지를 연중 내내 발신하는 것은 단호한 북핵 불용 의지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와 동북아만의 위협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엄중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방국가뿐 아니라 북한의 우방이었던 우간다는 북한과의 군·경 협력을 단절하고, 보츠와나는 2년 전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는데 금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이 불량국가로서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과거 중립 또는 비동맹 성향으로 직접적인 규탄을 자제해 왔던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중미의 니카라과와 같은 국가들도 동참해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적 제재·압박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실제로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서 '제재·압박이 극한점에 달했다. 전대미문의 고립·압살 책동이다. 레닌그라드 봉쇄에 견줄 만한 제재'라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태영호 주 영국공사와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례에서 보시듯이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까지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2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인권침해가 북한 정권의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에서 9쪽까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규명 요구의 지속적 확산, 그리고 미국과 EU 차원의 강력한 대북 인권 관련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는 동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11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엔총회 사상 가장 강력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는데, 금번 결의에 최초로 포함된 강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착취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 지도층(리더십)의 책임을 상기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도층의 통제하에 자행되고 있음이 최초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재원 전용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도 새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북한 인권 관련 사항을 유엔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강력히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미 행정부 교체기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해서 우선 미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인 측의 북핵 문제 관련 입장과 기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각료 보직에 임명되는 인사들의 성향이 구체적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당 정강정책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정책 지속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10일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셈법 변화 필요성과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안보·통상·통일 등 각 부처 고위급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 정부 고위급 실무대표단의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들의 분명한 인식과 대북 압박 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미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의 언급 사항,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등 여러 제반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미 신 행정부

는 기본적으로 강경한 대북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선거 결과, 미 상·하 양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 강경기조 유지하에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 의회는 지난 2월 18일 최초로 북한 제재만을 단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을 채택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부의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을 포함하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오바마 행정부도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뤄 나가야 한다는 입장하에 현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인수인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북외교 관련 한미공조 및 주변국 외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미 행정부 교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대선 직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언제든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1기 출범 이후 2차 핵실험,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직전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출범 직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에서 보듯이 미 행정부 출범 전후 기간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박한 신규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과 12월 중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현 행정부뿐만 아니라 신 행정부 측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 관련 현재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하에서 안보리 제재 이행, 독자 제재, 글로벌 압박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정부 고위실무단 대표단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도 이러한 방향성에 분명히 공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미·북 간 평화협정 주장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러한 위장 공세에 대한 한미 간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서 확장 억제 등 대북 군사적 억제를 위한 미 신 행정부 측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0일 대통령과의 통화 시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그간 미 정상을 포함한 각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이 신 행정부하에서도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0월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시 신설키로 합의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조기 출범을 통해서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소통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한편 미 신 행정부 출범 전후 중요한 시기에 대북외교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러 견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수년 간 중·러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왔는데, 중·러 양국은 우리와의 정상 및 여타 고위급 접촉 등 다양한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에 기반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다양한 계기에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 신 행정부와 함께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설득에 있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단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깥에서는 격랑이 일고 있는데 국내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 외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시 하면서 국가 안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중심을 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내적인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이해와 조언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윤병세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양석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켜 주는데 한국이 너무 방위비 지불하는 데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과 우리 한국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방위비 분담이 국민총생산 대비해서 국방비 비율이 2.6%고 또 미군 1인당 기준으로 해서도 제일 많은 돈을 내고 있고, 일본에 비해서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 소위 방위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이 없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나라마다 산정기준이 조금조금씩 상이합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이를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또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률적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양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자꾸, ‘대한민국은 물건은 미국에 팔아먹고 이익은 내면서 방위는 또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이런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를 해 보든지 아니면…… 국내에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과도하게 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사실 안 주려고 토지 제공이라든지 또 기지 이전 또 기지 주변의 환경 조성, 카투사 인력 제공 이런 내용들을 방위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선거 때마다 오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미국하고 이런 기준 문제를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는 선거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선거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지는 않으면서, 다만 이번에 정부 고위 대표단이 워싱턴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많은 기여를 하는지 또 경비 면에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얼마나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최근에도 미측 관계자들의 그런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한국이 비교적 잘하는, 상당히 부담을 잘하는 나라다 이런 또 반응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부의 각료 인선이 구체화되고 나서 실제로 미측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 일본은 지금 미군기지 이전비용이라든가 토지 임대료를 방위비 분담금에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게 제외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국민정서 감안해서 이런 비용들을 포함을 안 시키다 보니까 자꾸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선거 있을 때마다 미군 주둔비용 더 내라, 더 내라 하는데 이 차제에 아주 공론화해서 기준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정양석 위원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대북정책이 아마 후순위가 될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의 후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엔안보리 제재를 지금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 이 대화 과정은 2005년 9·19공동성명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지루하고 또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꾸 유엔결의라고 하는 좀 간편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쉽게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초기에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몇 개월 동안에는 그런 얘기 일체 없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트럼프 후보의 보좌진들의 면면이 굉장히 강성, 그런 보좌진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 측에서 이런 대화 문제를 지금 얘기하리라는 그런 것은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까지 채택된 마당에 국제공조를 앞서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충분히 염두에 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또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하든지 간에 한미 간에 굉장히 긴밀한 그런 조율이 있을 것입니다.

○정양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정양석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한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이 미국에 가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언론에 나왔어요.

(이춘석 위원장, 정양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외교적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벌써 국방부 측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방위사업청장 개인의 그런 의견이었을 것입니다마는 아직 방위사업청장이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대북 제재가 사상 최대 규모고,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은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런 조짐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제재가 효과를 봤다고 하면 이를테면 북한 체제가 붕괴 조짐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성의 기미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체크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게 내성만 더 키워 주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도 많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측면에서 제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파하는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이 사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외화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외화 수입원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안보리 추가 결의가 채택이 되게 되면 더욱더

북한 측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게 붕괴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반성의 기미로 가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로서는 일차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다시 전략적인 결단을……

○윤후덕 위원 비핵화 쪽으로의 반성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것을 저희가 우선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그 의견을 고집한다면……

○윤후덕 위원 그런데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다른 외국인이나 연구자들 얘기를 들은 것에 의하면 여전히 고려항공에는 탑승객이 꽉 차 있고 호텔에 가면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양에 사람들이 많고 또 이를테면 상당히 번화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성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압박을 느끼는지 그것은 좀 더 우리 정부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쪽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지요. 특히 트럼프가 백인들 저학력 제조업 노동자들의 울분이 표로 나타나서 당선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한미 FTA 등 통상 문제에서 상당한 자국 이익 위주의 통상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00여 차 이상을 접촉을 하셨다고 보고를 했는데, 접촉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될 것인지의 여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체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그런 언급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전환될지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또 한미 FTA의 호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트럼프 측 보좌진들도 그동안 저희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계속 트럼프 측 인사를 접촉을 하고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저희 측이 생각하는 한미 FTA의 효과를 포함해 가지고 미 측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얻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 점을, 저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조해서……

○윤후덕 위원 경제 문제에 대한, 통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좀 더 집중해서 새로운 행정부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윤후덕 위원 역시 예상대로 새로 들어설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다른 여지나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 전혀 스펙트럼이 없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또 이란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한다면 더욱더 강한 정책을 취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면밀히 더 들여다보고 조율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훈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소위 미국 정치의 아웃사이더로 평생 국정 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예측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각종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외치는 개혁과 변화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유동적인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정부는 미국이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아직 백지 상태와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담

론과 기류를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해 외교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자 측의 정책이 아직 불분명한 것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년만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여 차례 이상을 집중적으로 만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의 정책을 북한 문제 포함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고위급에서 또 여러 가지급 레벨에서 이러한 조율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특히 지난 70여 년간 유지해 왔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또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좀 전의 다른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마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또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포괄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할 생각입니다.

○조훈현 위원 트럼프가 그간 주장한 대외 정책의 기조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방향과는 배치됩니다. 트럼프는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나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통해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 안보우산에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와는 판이한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비관세 장벽과 통상 편법에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대응하자고도 합니다.

장관님은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실현될 것으로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내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행되는지 하는 것을 면밀히 보고 있고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100일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중에서 분명하게 제기된 것은 TPP는 아마 대선 과정에서 얘기한 것에 따라서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마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대로 이행을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가능하면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또 글로벌한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고위 인사들과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의 입장을 계속 개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훈현 위원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2차 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 분위기가 내부 지향적으로 바뀌고 트럼프가 국제주의에서 고립주의로, 자유주의에서 보호주의로 선회하고자 하는 것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설령 고립주의 노선으로 급선회하고 동맹을 폐기하고 싶어 하더라도 우선 미국 내 제도적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언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제4부라고 알려진 싱크탱크의 합의도 유도해야 합니다.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의회, 언론 그리고 싱크탱크라는 3개의 축을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는 기존 주장보다 어느 정도 완화된 절충점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고 충분히 숙고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외교 정책의 타협점을 예측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말씀하신 것처럼 미 행정부의 정책이 행정부만이 아니고 의회 또 각종 연구소 등의 입장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회 내의 코리아 코커스 등 친한 세력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신 행정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훌러 전 이사장을 포함해서 저희와 가까운 많은 고위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저도 스스로 다양하게 외교 측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광범위하게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현 위원 앞으로 두 달여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핵

심 진용이 짜입니다. 이들과 긴밀한 대화 채널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라인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조훈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장관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것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간단하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진노선의 무모함을 깨닫고 하루빨리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 준다면……

○김종대 위원 그게 목적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종대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게 목적이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것을 일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 북한을 고립·압박하고 또 북한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보고서상의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얼마나 아파하느냐가 마치 제재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의 어떤 지표인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서술이.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의 길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김종대 위원 그리고 그렇게 비핵화의 길로 가는 것은 국가의 하나의 대전략이 있고 거기에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수단들이 망라가 되어 가지고 이게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 수단들이 배치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우리가 가야 될 목적, 목표를 잘 달성하느냐.

그런데 북한이 아파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게 국가 전략이 되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안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내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큰 전략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가 더 공고화되고 궁극적으로 통일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마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전략을 더욱더 거꾸로 가는 전략을 취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어떤 경로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이 보고서의 서술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말씀드린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뿐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번에 채택이 되었고 또 앞으로 추가로 채택이 되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서 보여 준 하나의 공통 인식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 외교라는 것은 현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국제사회가 그렇고 상황 인식이 그러면 관리만 하는 게 외교부냐? 그런 것을 잘 유지만 하는 게 외교부냐? 아니지요,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가 비핵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목표 지향적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에 책임지는 집단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저희는 목표도 다 있고 또 로드맵도 있고 비전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2차대전 이전에 히틀러를 포함해서 파시스트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한쪽이 확신을 갖고 한쪽으로 몰고 나갈 때는 강한 그런 힘이 뒷받침

되지 않게 되면 그 평화라는 것은……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정상외교에 대해서 연간 계획한 정상외교가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떤 보완 대책 강구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까지, 금년 지난 11월까지 정상회담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가 차질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게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10월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대부분이요. 물론 지금 남아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 외에는 주로 외교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레벨에서의, 우리 외교부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예정된 특별한 정상외교가 없기 때문에 설령 국내 정치 상황이 위중하다 할지라도 큰 차질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금년도 외교 일정 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일중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본 측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종대 위원 특별한 차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보완할 내용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양석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1분만.

장관께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최근에?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는 외교 업무의 성격 때문에 행사도 많고 그래서 비교적 자주 보고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마 행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기억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 행사 관련해서, 그러면 최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라든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나 이런 국가의 중요 안보정책, 이 중대한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외교부가 전적으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를 합니다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NSC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김종대 위원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 NSC가 최근에 열려 결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회의에는 총리 주재 회의가 있어서 저희 외교·국방·통일장관들이 총리 주재 회의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당의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정상외교가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했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남아 있는 정상외교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용호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추진된 것이 없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상 제일 정상회의가 많은 시기가 9월, 10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대개 지나갔고,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일본이 의장국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금년 내로 주최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회는 지금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되는지요, 아니면 대참을 하게 되나요, 총리가?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날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전망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개시될 경우에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은 참석할 것으로 본다는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용호 위원 정상외교라고 하는 것이 한두 달 전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 내년 초, 내년 상반기 정도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개 저희가 연간 계획은 연초에 대통령에 대해서 각 부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주로 1월 말이 되든 2월 초가 되든 그런 종합계획을 할 때 연간, 정상외교를 포함해서 외교부 전체 계획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겁니다.

○이용호 위원 사드는 예정대로 배치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국방부 측에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중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주도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국방부가 주무 부서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그동안에는 NSC 협의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 부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야당이나 국민들 상당수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국방부장관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시점만 가지고 보게 되면 급작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국방부에서 89년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가 필요로 해서 또 제의했던 사안입니다.

○이용호 위원 이것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일 간의 어떤 정보를 긴밀하게 사드의, 소위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유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말씀드린 연혁에서 보시게 되면 사드 배치 결정을 하기 한 20년 전에, 십몇 년 전에 벌써 우리가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의를 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사드 배치 결정과는 일단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최근에 우려스러운 것이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한국드라마를 더 이상 틀지 않는다, 한류, 중국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이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외교부장관님이나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늘 사드 배치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들 답변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소위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그러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은 소리 나지 않게 차근차근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난주 21일, 월요일 날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내에 한한령 보도가 나왔을 때 중국 측에서 무슨 보복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방 정부라든가 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예정이 됐다가 취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일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어떤 지침을 하달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호 위원 우리 장관님의 답변은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위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는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할 단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도 그점을 아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관들이 책임지고 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가 되고 나서 권력 교체기에 접어들었고 이런 문제나 그 외에 중국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서 정말로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된다 그런 요청을

제가 드리고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고 또 많이 지혜를 주시기를 저희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김두관 위원입니다.

장관님, 트럼프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완전 기조가 바뀌어 버린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초기에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대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동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훨씬 더 강한 얘기들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나 또 그 보좌진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겠다, 100% 같이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을 토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정부 약 4년, 9년 동안 대북 제재 일변도로 계속해서 정책을 취해 왔는데, 실제 북한이 어느 정도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에 앞서서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다, 과거에는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4차·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 상태로 놔두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구도가 이제 좀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매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현재 이러한 제재가 만약에 예정대로 이행이 된다면, 과거 이란이 결국은 제재에 손을 들었던 전례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유엔이나 우리 한미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이란 모델을 북한이 채택하면 좋겠지만 이란하고 북한은 만족 요건이 다른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출구가 열려 있는 거라서 실제 그렇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데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그런 핵 도발,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상황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이라든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수차 밝힌 상황이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공개적인 얘기보다 훨씬 더 강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앞으로 평화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견인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이라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두관 위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부 초기에 보도가, FTA에 대한 그런 비판·언급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신정부의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또 있으십니다마는 하여튼 현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자나 트럼프 보좌진에서 또 내정자들이 FTA를 재교섭하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장관님, 예를 들면 재협상을 하면 어떤 부분을 내주고 어떤 이익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까, 만약에 재협상을 하게 되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 때 산업부를 포함해

서 우리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트럼프 측에다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가 얼마나 미 측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더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두관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전시작전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비용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부분은 없나요, 새 정부와 관련해서?

한국군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또 자주국방 차원에서 전시작전권을 되돌려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 수석으로 계실 때 그 부분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작권 문제는 참여정부 때 그러한 합의 후에 북한의 3차 그다음에 금년 4차·5차 핵실험 또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도발 이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정부에서 오랜 협의를 통해 미측과 조건에 입각한 전작권 전환 연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판단기준이 충족될 경우에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미측과 상당히 긴밀하게 조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두관 위원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 정말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실제 우리 국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면이 매우 축소되는 점들을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는 이제 긴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작권에 대해서는 흔히…… 여기 김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최고의 전문가가 계십니다마는 일각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전작권을 미측이 사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미측이 맡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양국 군통수체제를 거쳐서 양국 지도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측에서 보더라도 현재 연합방위구조가 미국의 여러 나라와의 동맹관계에 비쳐보더라도 상당히 아주 잘돼 있는 체제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이런 것을 같이 보면서 계속 한미 간에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두관 위원 장관님 설명을 들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 그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 위원 장관님, 국민의당의 최경환 위원입니다.

의원님 중에 저와 이름이 똑같은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업무보고 듣고 또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면서 장관님과 외교부가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계속해 왔던 관성 그리고 희망적 관측 여기에 빠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정권의 등장, 한국에서의 리더십 실종—탄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는 5차 핵실험 이후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고 했던 2270 솔루션이 결국 실패했습니다.

또 오늘 보고에는 가장 실효적인 제재안이 금주 중에 발표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내 어느 누구도 또 국제사회에서 새로 나온 대북 제재안에 대한 동력들에 관심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성과 낙관적·희망적 예측에 근거해서 정책적 판단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를 들면 이번에 추가 제재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중국

과 러시아가 앞으로 이것을 이행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다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도 상당히 많이 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의를 채택하게 되면 모두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보리 결의는 대부분이 다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행보고서를 또 내게 돼 있고, 해서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것은 과거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는 앞으로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경환(국) 위원 그런 말씀들은 1월 달 4차 핵실험 이후 2월에 2270이 채택될 때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트럼프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허입니다. 언술들, 캠페인 때 트럼프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말로 보면 예측 불허인데,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선제공격까지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김정은 초청해서 햄버거를 먹겠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두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경한 진용들이 구축되면서 전자의 방향으로, 대북 강경 정책의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즉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세계 경찰국가로서 모든 국제사회에 군사 개입을 함으로써 미국의 민생만 망쳤다고 하는 논리, 또 하나는 ABO(Anything But Obama)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해야겠다는 실리주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북미 간에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북미 대화·협상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핵과 미사일 추가 발사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측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들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경한 진영 또 강경한 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선택지와 다른 선택 옵션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정책 방향을 바꿔 볼 수 있는, 변화시켜 볼 수 있는……

○위원장대리 정양석 1분 더 드리시지요.

○최경환(국) 위원 지난 한 7~8년간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대북 강경 정책 또 우리 정부의 정책들이 결국 5차 핵실험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예측되고 또 지금도 계속 결의안을 통해서 목표를 비핵화에 두고 있는데 여러 국제사회에서, 미국 조야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핵 동결과 비확산으로 목표를 수정해서 현실적인 대화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강경노선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묶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여러 가지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토대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많이 존경하고 또 만나기도 했던 키신저 박사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한 얘기를 너무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트럼프 당선자한테 새로운 정책을,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함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제 취임을 하고 각료들이 인선되게 되면 모든 정책을 취할 때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서로 다 공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항상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 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장관님, 최근에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두고 외교적인 적신호이다 이런 판단을 많이 언론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혹자는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라는 막말에 가까운 표현까지도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읽어보시게 되면 20여 개 조항으로 돼 있는 상당히 기술적인 협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양측이 각각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제공된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상당히 절차적인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개 국가와 우리가 협정 내지 협약을, 약정을 갖고 있는데 문안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나라나 해당되는 나라 간에 기밀을 교환할 경우에 이러한 절차가 없게 되면 협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협정을 맺어 놔야지만 그런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국방부 측에서 오랫동안 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줘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동의할 경우만, 우리가 결심을 할 경우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쓰라-태프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약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 위원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언론을 통한 어떤 지면이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나 등등 아니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오도되고 호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응과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 측에서 실제 사드와 군사정보보호협정 결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현상을 저희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10월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공연 승인을 받은 한국 스타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시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한류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현지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할 경우에 혹여라도 한류 제한 조치에 이어서 한국 대기업에 중국 공장을 포함한 실무적이고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되고 있는 입장인데 외교부가 서둘러서 이에 대한 방안 내지 예측 가능한 시건장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금 전에도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제재라든가 보복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특히 한류 부분은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해당되는 중국지역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많이 파악하고 있고 또 이러한 보도가 있을 때마다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국 측의 조치가…… 하여튼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순례 위원 아무튼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현실들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위원장대리 정양석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가 대북관계와 관련해서 실지 아주 답답하지요.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 통일과 외교정책 자체가?

○외교부장관 윤병세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결국은 병진노선을 통해 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백재현 위원 북한은 체제가 무너진다고 보는 게 정설이지요, 핵을 포기했을 때? 북한 정부 체제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

들 견해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북한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다면 제재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백재현 위원 무력에 의한 제재 말고 통상 압력이나 외부적인 요인을 줄여 가지고 좀 어렵게 살아가게 틀을 만든다고 해서 무너진 나라가 있냐고요, 역사적으로?

○외교부장관 윤병세 최근에 가장 비근한 예가 이란입니다마는……

○백재현 위원 이란은 체제가 무너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이 바뀌었을 뿐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란이 손을 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미국과 EU를 포함한 서방의 제재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백재현 위원 그것은 정책을 바꾼 거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무너진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러면 핵을 포기하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제재로 인해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틀은 어느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내부의 힘으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부 소통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들은 역사상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그런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북한 제재 일변도 정책이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부가 항상 대북관계 관련해서 강경일변도만 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많은 경우 대화를 위한 노력도 많이 했으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사실 2014년과 2015년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화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은 어떤 것일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남북간에 휴전선 쳐져 있지 않고 충분히 왕래하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틀만 만들면 우리는 통일로 보는 거예요. 꼭 체제가 하나 된 정부, 하나 된 국가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북한은 확대 폭만 넓혀주면 돼요, 교류하는 폭만. 그게 통일운동이고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고.

그런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지, 핵이라는 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핵 다음은 아무것도……

인적교류 자체도 줄어들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도 다 줄이는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통일부한테 알리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정책들은 외교부도 정책을 크게 바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백 위원님, 전 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백재현 위원 다른 나라들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당연하고 일본을 포함한 미국, 심지어 EU까지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위협의 문제로 생각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백재현 위원 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요.

트럼프 이후에 미국 행정부 전환과 관련돼서, 특히 방위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방위비를 한 1조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1조에 가깝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매년 구천수백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8900억, 금년도 9400억 정도…… 15년도 그렇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투명성, 방위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대인 비용은 아니고 전부 비대인, 비인적 비용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군사 건설을 포함해 가지고……

○백재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투명성 부분은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통위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다 보고도 드리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주로 교섭은 외교

부가 그동안 합니다마는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처인 국방부가 국방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요구할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데,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새로운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는 좀 더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도 뭐에 쓰는지……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뭐에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적다 많다는 판단이 서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와 협상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2013년, 14년에 저희가 교섭을 할 때에도 과거와는 좀 더 훨씬 틀이 다르게 아주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세한, 미 측에서 볼 때는 아주 상당히 더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하는 협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정기적인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한 요소를 보다 더 많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현재 5차 핵실험 이후에 추가 제재사항은 안 나왔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금주 중에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어떤 내용이 담겨질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늘 제가 모두 보고에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동안에 '민생 예외조항'이라고 한 부분을 상당 부분 더 강화시켜서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석탄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단호한 조치가 이번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새누리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지난 3월에 채택된 게 여기 자료에 보면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의 해관총서—우리나라로 말하면 관세청인데요.—공개한 대북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를 보면, 이 그림에서 파란 막대기는 작년이고요, 빨간 막대기는 금년인데, 그 결의안이 통과된 3월 이후의 추세를 보면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전혀 눈에 띈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대북 수입을 보면 3월 이후에 빨간 막대기는 더 늘어나는 추세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 어떻게 중국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얻어낼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그리고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엄격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중국의 대북제재는 매우 형식적이고 립서비스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는 중국이 어떻게 대북제재 시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자료 저희도 상당히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는 통계입니다마는, 2270호 결의 채택 이후에도 해당되는 달에 따라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석탄 수입이 좀 더 많은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분야의 광물을 포함해서 그런 수입이 더 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이번 10월에 들어서 많은 수입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민생 예외조항이 새로운 결의에 의해서 상당히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수치들이, 이런 예외조항을 북한 측이 악용해서 그것을 수출했던 것이라면 그러한 예외조항 부분은 이번 추가적인 결의에 의해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차단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측에 대해서 이러한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안보리에 해당되는 기구나 또 저희 우방국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은 금주 중에 추가 제재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석탄이 민수용인지 군사용인지 이게 구분이 분명치 않아서 루프홀(loophole)이 생긴 것 같은데, 이번 추가 제재안에는 구체적으로 제재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민수용·군사용 구분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한 측면도 염두에 둔 적절한 그런 절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석 위원 아직 공개하시기는 좀 이르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곧 그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최근에 소위 한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움직임 이게 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부인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문화 관계가 좀 거품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나 문화 활동이 중국에게 너무 의존됨에 따라서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 우리 국익에 대해서 상당한 지렛대를 갖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중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서도 이런 종류의 거품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제재 비슷한 분위기를 유도할 때 오히려 대중 관계를 경제·문화뿐 아니라 외교안보 면에서도 거품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거품이라든가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으로 대중관계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문화교류들은 사실 양측 모두에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한중 간에는 인문교류 측면에서 많은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도 염두에 두면서 아마 문체부라든가 정부 내에서 많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간의 그런 교류는 중장기적으로 한중 간의 발전에 도움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동민 위원 질의 차례입니다만,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는 우리 특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잡혀 있었고 또 이 보고 내용이 굉장히 시의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국과 관련해서 각 당의 의원총회라든가 대책회의가 잡혀 있어서 아까 3당 간사 간에 가급적 오전에 회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해서 시간을 5분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1차 질의 끝나고 혹시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더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인데요, 여야의 국가 원로들께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부분들을 엊그저께 주문하셨어요. 새누리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실세 분들도 어제 '명예롭게 퇴진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와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기보다는 탄핵의 절차를 밟아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장관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할 사항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동민 위원 외교부장관은 국무위원 아니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구체적인 말씀, 법적 절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동민 위원 적절치 않다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기동민 위원 국무위원께서 지금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대로 말씀을 주셔야지요, 왜 적절치 않다고 피해 가십니까?

탄핵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퇴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구체적인,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언급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기동민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으로서 그 직분에는 충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는 제가 이 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외교업무 관련해서 소신껏 죽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소신껏 해 오셨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기동민 위원 그러면 NSC 멤버의 일환으로서 지난번 사드 도입 과정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들도 그렇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렇고 전부 다 외교부장관의 소신이 개입된 결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부나 NSC 내지 유사한 구조하에서는 항상 치열한 토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게 되면 정부의 입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드……

○기동민 위원 외교부의 입장을 물은 겁니다. 정부의 입장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교부장관으로서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적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의견을 피력하고 그리고 외교부에서 고유의 역할들에 충실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부는 항상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을 NSC나 이런 데서 토의할 때는 저희가 보는 아주 전문적인 관점과 전략적인 관점을 아주 종합적으로 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합니다.

○기동민 위원 지금 NSC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 내의 모든 주요 각료들이, 해당되는 각료들이……

○기동민 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김관진 안보실장이 전부 다 모든 걸 주도하시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안보실장은 NSC 주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기동민 위원 국방부장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였고, 지난 정부에서도 국민적 여건들이 그리고 국민적 감정이 채 성숙하지 않았고 충분한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정보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국방부의 결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정당의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건들이 성숙되어서 결정하신 건가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의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끝나지 않고 작전의 공유, 나중에는 군사력의 공유로 비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이 시점에 굳이 서둘러서 결정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결정을 대통령이 한 것인지 김관진 안보실장이 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는 과연 금방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내 가면서, 주변 4강 외교를 염두에 두고 균형자 외교에 충실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저는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교적 입장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뭔가 균형자 외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장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제가 처음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장관 역시 책임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단순히 국정농단 세력 그 일부에 드러난 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함께해 왔던 국무위원들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남북관계 그리고 한중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이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대한민국 중심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운명을 개척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질책과 매서운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김현웅 장관이 법무부장관직을 사퇴했던 것처럼 외교부장관 역시 그 직을 사퇴하고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직을 맡은 이후에 단 하루도 자리에 대해서 연연해하면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것이 하루가 되든 며칠이 되든지 간에 제가 맡은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각오로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한반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장관이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통령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께서 정책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국민들은 차갑게 외면했고 시장은 더욱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사적 소임을 본인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외교 역시 윤병세 외교부장관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거고, 그 시스템이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외교적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럴 의향이 전혀 없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 연연해한 적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동민 위원 연연해하지 않으시면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직을 사퇴하시는 게 맞다니까요. 김현웅 장관은 그 직에 연연해서 남아 있었습니까? 그런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냥 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도리, 장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 외교부장관께서 이 시국에 모든 것들을 걸머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정양석 기동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이따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위원 제가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데 거기 법안소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쟁점 법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서 좀 늦게 온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매우 격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직자들은 특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때 특히 외교부는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국가의 대외신인도 이런 것도 유지하셔야 된다는 국가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의 국정공백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답변을 듣기보다 제가 몇 가지로 질문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과정이 몇 개월 진행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도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힐러리 후보의 당선을 확정시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다룬 뉴스나 이런 것을 보니까 트럼프 후보 측에서, 이제 당선자인데, 당선자 측에서 우리나라의 언론과 국민이 일방적으로 힐러리 후보를 지지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초반부터 상당히 부정적이고 우리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형평성 있게 잘 준비했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하여튼 우리가 트럼프 당선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돼 있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 자체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성장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전방위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한 번은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또 한 번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둥 우리로서는 상당히 일관성 없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10월 20일인가 10월 말경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의 대미 외교라인과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이 접촉한 것이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상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또 장일훈 주유엔 차석대사 등 상당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특히 힐러리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입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사들이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관여했던 인사 중에 트럼프 정부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즉 트럼프 정부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금년 내내 북한 정부가 과격한 무력시위를 하는 도발행위가 사실은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진단도 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이런 무력시위나 도발이 조금 완화되면서 북미 간에 접촉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지난 2월 미국 CBS 토크쇼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을 통제하는 데 중국의 힘을,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던데, 미국이 중국의 제조업이나 수출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 실제로 한다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그런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질의이기는 하지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또 대한반도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11월 초 정상 통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동맹과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100% 같이 하겠다.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를 통화를 통해서 했고요.

또 이어서 지난 한 열흘 전에, 2주 전에 정부의 고위대표단이 워싱턴을 가서 트럼프 측의 외교안보 보좌진들과 광범위하게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포함해서 저희 동맹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또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회의 전반적인 강경 기조가 전체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판단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트랙2 말레이시아 접촉은 미국 정부가 누차 밝힌 것처럼 미국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민간 차원에서 늘상 해 오던 민간 대화입니다. 말씀하신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은 민주당계 인사이기 때문에 공화당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것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 대화를 예고하는 시사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무력시위 또는 전략적인 도발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도모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관련해서, 저희로서는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북한이 5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하나의 평화공세 차원에서 진정성이 없는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미국 신 행정부에 여러 가지 저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지금과 같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할 관련해서는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떤 분야에서는 그런 역할을 더 독려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더 경쟁적인 측면 또는 압박적인 측면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 행정부의 관련 인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명되고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더 저희가 한미 간에 많이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혹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기동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장관님, 작년 9월에 대통령께서 천안문 망루에 서셨어요. 대단히 파격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려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요, 오바마 행정부의 노골적인 압력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한민국 외교가 뭔가 균형자적 외교 측면에서 열강들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행보들을 시작해 나가는 그 첫걸음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성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중국은 포기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초 중국 방문을 포함해서 정부의 한중관계에 대한 입장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역할, 또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의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동민 위원 장관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빤한 정답을 주시면 현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답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교라고 하는 게, 양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망하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9월 초 방문에……

○기동민 위원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일방성들이 관철되어서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륙세력—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홀해지면서 우리가 뭔가 적대적인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그 나라를 내치는 듯한 느낌들을 그쪽 나라들이 갖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들을 위무하고 달랠 수 있는, 아니면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니까 다른 유인책들을 주어서 뭔가 예전의 과정들을 복원시켜낼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있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작년 9월 초 중국 방문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이어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한일중 정상회담을 2년 반 이상, 3년 반 이상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주도로 2년 동안의 노력 끝에 중국을 동의시키는 중요한 목적이 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동의해서 작년 말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는 것, 정상화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근 저희의 사드 이후에 한중관계 관련해서 우려가 있으십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한미일 삼국 간의 안보협력을, 대화를 강화하는 것들은 중국을 겨냥하거나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제가 모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들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일본도 위협을 느끼고 또 미국도 위협을 느끼고 저희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양국 관계가 사드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국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 중국과 앞으로도 소통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중국도 그동안 한중관계가 역대 가장 좋았던 관계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최근까지도, 사드로 인한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한중관계는 계속 발전될 것이라는 얘기를 주한대사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계속 한중관계가 정치·경제·안보 또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양측이 모두 노력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동민 위원 장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 여기에서 그 많은 말씀을 토론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하실 때 제가 아무리 사퇴하라고 그랬다고 기분 나쁘시다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메모만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얼굴 보시면서 말씀 주십시오, 눈 쳐다보면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웃으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제가 지금……

○기동민 위원 저는 여전히 장관님이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장관님이 무엇이 미워서가 아니라 국무위원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

외교적 측면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도적으로 관철시켜내지 못하고 NSC라든지, 아니면 부처 내에서 다른 어떤, 제가 보기에는 매파 강경세력의 일변도에 외교부가 그냥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퇴하실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국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백기에라도 진심으로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NSC 내에서도 통일부라든지 아니면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도 당당하게 소신 있게 발언하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대한민국 외교가 정말 뭔가 새로운 침로(針路)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균형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주도적 역할들을 정부 내에서 그나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자리에 대해서 추호도 연연해하지 않았고, 또 그런 각오하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또 어떤 회의체에서든지 간에 항상 제 입장을 분명하고 소신껏 전달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임기의 마지막까지 하여튼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임무를 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민 위원 저 안 좋아하시는 게 맞네요. 끝까지 밑에만 보고 말씀하시네요.

○위원장대리 정양석 (웃으면서)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위원 장관님께서 이미 포부와 일하시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지만 제가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체제도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대북정책이나 동북아에서의 외교정책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이 외교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지금 당선인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세팅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미국의 이런 정책이 바뀌면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등 여러 외교노선이 많이 바뀔 것이고 또 동북아 질서 이런 것

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속성장과 선진국으로의 부상은 어찌됐건 굳건한 한미동맹이 큰 기반이 되었는데 지금 국내적으로도 보면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도 외교부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도 전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격변기에 공직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 위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 윤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엄중한 시기에 아주 긴박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나의 분야, 외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더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봐요.

탄핵 시 국무위원으로서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 몇 번째 순위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구조상으로 총리, 부총리가 있고요.

○최경환(국) 위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다음에 장관님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앞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미래부가 정부구조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한 대여섯 번째 권한대행 순위가 되시는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구조상으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만큼 책임이 크신 상황입니다.

3년 반 박근혜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탄핵 이후에 닥칠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 1960년 4·19 때 허정 외무부 선배 장관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셨어요. 외교부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몇 개월 아니지만.

그래서 보다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는데, 정부에서는 그 유사 협정이 33개국……

○외교부장관 윤병세 32개국이 있고, 기구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 나라를 상대로 해서, 특정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된 협력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국) 위원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이미 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국은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요.

○최경환(국) 위원 러시아하고는 체결이 됐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러시아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러시아에도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북한 핵 문제로 체결한 건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협정 자체의 표현은 북한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

○최경환(국) 위원 러시아하고 협정 맺을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안보 위협을 이야기한 거지.

중국과도 북한의 핵 문제를 위해서 군사정보협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개 주변국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반도와 관련된, 특히 북한 관련된 정보가 아마 제일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깔릴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도 일본 측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가 꽤 있고, 또 저쪽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호혜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저 후보자들에게 어떤 인맥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또 전전긍긍해야 되고 하는 그런 외교,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탄핵 위기에 있어서 국가를 외교적으로 대표하는 장관님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이면서 외교적 동력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지켜 주시고.

또 중요한 건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 시대에는 우리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한미 관계를 더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윤병세 장관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림도 제시해 주시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부가 승계할 건 승계하고 개선할 것은 자아비판처럼 보이지만 아쉬웠던 점은 반드시,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숙제로 스스로 제시하는 것이 외교의 일관성 또 연속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보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회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기동민	김두관	김순례	김종대
김종석	백재현	윤후덕	이용호
이춘석	정양석	조훈현	최경환(국)
최연혜			

○청가 위원(2인)

설 훈　전해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윤병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홍균
기획조정실장	백지아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함상욱
동북아시아국장	정병원
유럽국장	임수석
국제기구국장	이장근
북핵외교기획단장	이상화
평화외교기획단장	김용현